

북한 전문가 지상 토론

#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대응 방향

스칼라피노(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伊豆見 元(静岡縣立大學 교수)

김 덕(전 통일원 장관)

이병룡(민족통일연구원 원장)

## < 토론 종합 >

### 1. 북한 엘리트의 탈북 현상이 갖는 배경과 의미

최근 북한 엘리트의 탈북 현상 증가에 대해 스킨라피노와 이병룡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엘리트들의 불만이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탈북 현상의 증가를 북한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인 또는 체제 위기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伊豆見 元은 북한 엘리트의 탈북 현상을 북한 체제의 불안과 경제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급격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덕은 북한 엘리트의 탈북 사태를 북한 엘리트의 불안과 기강 해이 즉, 북한의 엘리트 관리 체제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체제의 말기적 증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김덕은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은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체제가 김정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경우 북한 체제는 2~3년 안에 붕괴(단기 붕괴)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4~5년 내) 붕괴(정권 붕괴→체제 붕괴)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伊豆見 元은 갑작스런 붕괴든 점진적인 붕괴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체제 붕괴는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병룡은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거부할 경우 김정일의 실각 또는 북한 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스킨라피노는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① 붕괴, ② 현상 유지, ③ 연착륙(점진적 변화)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3. 대응 방향

북한의 항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 체제가 갑작스레 붕괴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량 난민 문제, 군사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장기 붕괴 또는 연착륙(점진적 변화)일 경우,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문화적 교류 증대 등 대화와 접촉의 확대가 필요하다. 붕괴와 연착륙, 그 어느 쪽이든 외교적 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국과의 우호 협조 관계를 유지·증진시켜나가는 한편, 군사적 위기 즉,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론 통일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伊豆見 元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4. 현 단계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스킨라피노는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 등 북한과의 접촉과 협상을 도모하는 포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伊豆見 元 역시 북한의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며,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재개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덕은 연착륙 보다 경착륙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컨대, 북미간 미사일 협상을 3국의 대북 지원과 연계시키는 등 3국간의 빈틈없는 공조 체제,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룡은 우리 정부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등과 같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병룡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미일의 대북 지원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미일은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 하에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 변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여 대북 정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태섭)

1.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 엘리트의 탈북 현상이 갖는 배경과 의미

삼비아 북한 외교관 부부의 망명 사건에 이어,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 일가의 북한 탈출 사건에서도 보이듯, 최근 북한 상층부의 탈북 현상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북한 상층부의 탈북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스칼라피노** 엘리트 구성원들이 가족 혹은 오랜 기간의 인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는, 이들 엘리트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압력과 급격한 변화에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패배한 쪽이 은퇴하고 물러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복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물론이며, 최소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이나 특혜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 조국을 떠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의 방명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최근 방명 기도들이 김정일 정권에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빈도가 높지 않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이들 방명에는 매우 사적인 동기들이 숨어 있었으며, 정치적 혹은 이념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산적한 정치·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북한 엘리트들이 현재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伊豆見 元** 최근 북한의 망명자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사망에 따른 경제 곤궁의 심화, 식량 부족의 심각화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경향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북한이 보다 어려운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지만, 소위 '엘리트층'의 망명자가 앞으로 연간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으로 본다.

**김덕** 북한 엘리트의 탈북 사태를 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견해로서 수긍하기 힘들다.

엘리트가 체제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이것

은 북한 체제의 말기적 증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사태는 북한 상층부 내의 불안과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 체제의 지탱을 위한 엘리트 管理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병룡** 최근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현상이 증대되고 있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비교적 외부 사정에 밝은 엘리트간에는 북한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김일성 사후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온건한 성향을 보이거나, 실무 능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발언권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주민 이동이 자유로워진 중국 및 러시아가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엘리트의 탈북 현상은 외부 정보 유입과 해외 생활 경험 등에 의한 체제 비판 능력의 제고와 이에 따른 북한 체제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만 표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탈북을 북한 체제의 위기로 보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북한 체제는 곧 붕괴될 것인가?

식량 기근 등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 상층부의 탈북 현상 등과 관련하여,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곧 붕괴될 것으로 진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중기 붕괴 혹은 장기 붕괴로 보시는지, 또는 중장기에 걸친 점진적인 체제 변화로 보시는지, 북한 체제의 향방에 대해 전망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러한 입장파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십시오.

**스칼라피노** 수많은 변수들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사회의 미래에 대해 單線의인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각의 가능성 안에서 여러 가지의 변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붕괴가 발생한다면, 이는 엘리트 내부에서의 갈등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반항에 필요한 조직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내부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파당 싸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특히, 한쪽이 외부에 원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현상 유지(hold the line)' 시나리오이다.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위상이 강화된 현 정부가 생경한 권위주의적 통치 수단 및 강화된 이념 교육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권위주의 사회들이 이보다 더한 악조건 하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 가능성은 '연착륙'(soft landing)이다. 즉, 점진적 개혁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진입·통합되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개혁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伊豆見 元**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붕괴한다”든가 또는 “당분간 유지된다”라는 논의를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느 쪽의 관측이 정확할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우선, 상식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북한 체제가 어쨌든 붕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체제 유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재건 특히, 국민 생활의 향상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력更生' 노선을 포기하고, 대담한 정책 전환을 단행하고,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사회에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 개방 정책의 전개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풍요로운 실상'을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되어, 현 북한 체제의 유지를 극히 어렵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체제 유지'와 '경제 재건'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에 있게 된다.

물론 현재의 평양 지도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대담한 전환책은 채택하지 않은 채, 현실적 방향으로 소폭의 변화를 그때 그때 내놓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을지라도 체제의 유지만큼은 어떻게든 도모할 자세이다. 요컨대, 어려움을 “어떻든 타개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이외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체제 수호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는 배제하고, 경제 재건에 유리한 요소만을 받아들인다는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 정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 결국,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체제 붕괴의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붕괴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덕** 북한 체제가 김정일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운명을 같이 할 경우, 북한 체제는 2~3 년 안에 붕괴(단기 붕괴)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 붕괴(4~5 년)로 끝을 맺을 것이다. 이 말은 설령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당분간 붕괴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그리 멀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북한 위기의 핵심은 경제 위기이고, 경제 위기의 해결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유일 지도 체제의 근본적 수정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차 북한의 선택은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수정이 아니면 경제적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더라도 김정일 정권은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군부 집단 지도 체제 같은 형태로 사회주의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나, 반세기 동안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뼈筋으로 지탱되어온 북한 체제가 그 골근을 떠나 오래 유지되기는 여차피 힘들 것이다.

**이병통** 현재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비추어볼 때,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첫째,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층이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력 투쟁이나 노선 갈등의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은 장기간의 내핍 생활로 인해 궁핍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경제난이 단기간 내에 체제 붕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북한 당국의 정치·사회적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어렵다. 넷째, 북한은 현재 對南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대내적 위기의 어려움을 남한에 전가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 거부로 북한 사회의 제반 문제점들이 누적될 경우, 김정일의 실각 또는 북한 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3. 대응 방향

북한 체제의 향후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까요? 다시 말해 북한 체제의 단기 붕괴라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 붕괴라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점진적인 체제 변화라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북한 체제의 향방과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한국, 미국, 일본의 대응 방안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스칼라피노** 북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관련 국가들로서는 진술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붕괴의 경우 발생하게 될 대량 난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북한 사회 흡수에 소요될 엄청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내 장기간에 걸친 파벌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진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군사 권위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및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최선의 결과는 연착륙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그 누구도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의 실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접촉 증대를 통한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伊豆見 元**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북한 체제가 돌연 붕괴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또 동시에 이 기회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일시에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우선, 그러한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빠져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물론, 우리가 북한의 식량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식량 원조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농법을 개선하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구하든 북한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다. 동서 고금의 역사를 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궁지에 빠진 쥐

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상황이 한반도에도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조선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서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에게 머리를 숙인다”라는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경솔하게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대응책을 세울 때에는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지 않는다”는 정책의 채택은 무엇보다도 크게 우선되어야만 한다.

둘째, 우리가 위기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그러한 유사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우선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미국의 對한국 지원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피난민이 발생할 것도 상정해서 그들의 수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체제가 당분간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上記의 ‘돌연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함께 북한을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로 유도하는 노력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김덕** 북한 붕괴 과정과 그에 뒤따를 남북 통합 과정을 되도록 적은 충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준비는 역시 군사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의 실천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동서독의 군통합처럼 단시간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며, 또한 동서독 경제 통합의 시행 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되는 북한 붕괴 과정과 남북 통합 과정의 순조로운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 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여건 조성에 미리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병룡**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북한의 對南 도발 기도를 억제하기 위해 국론 통일을 유지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 한편,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 및 체제 붕괴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추진해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통일의 미래상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구현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력을 배양해나가되, 조기 통일을 대비한 통일 비용 조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4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북한 체제 변동시 우리와의 긴



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통일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현 단계에서 한·미·일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이상의 논의에 바탕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후유증 또는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남북 통일의 실현을 위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나 미·일의 대북 관계 진전 문제 등 현 단계에서 한·미·일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각 말씀해주시시오.

**스칼라피노** 북한 식량난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異見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한 여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기아와 영양 실조 현상의 방지는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식량 부족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통일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對북한 관계 개선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 첫째는 북한에 의한 제네바합의의 지속적인 준수이며, 둘째는 1991년 12월 합의에 의거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정기적 대화 창구의 마련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포용(engagement)은 온건을 낳고, 고립(isolation)은 극단주의를 부른다. 필자의 견해로는, 가능하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북한과의 접촉과 협상을 도모하는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伊豆見 元** 현 단계에서 한일 양국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북한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북일 정상화 교섭의 재개는 불가피하다. 또 한국도 재차 ‘말행 정책’으로 전환해서 미일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장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덕** 북한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를 이행하는 데 주저할 정도로 매사에 여유와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현재의 절박한 처지에 놓인 북한 지도자에게 개혁과 개방을 권유하는 것은 항복의 권유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일 3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눈앞에

서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보여주는 일이며, 3국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한 조심스러운 대북 협상을 하나씩 진전시키는 일이다. 지금 모색되고 있는 북미간의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협상 같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므로, 3국의 대북 지원을 그러한 협상의 진전과 현명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북한은 軟着陸하기보다는 硬着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착률의 충격을 되도록 줄이기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 정책 조절을 위한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병통** 현재 북한은 대외 관계 개선 특히,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겨냥한 '남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남 비방 및 남한 배제 등의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북한이 곧 변할 것이라는 속단에 근거한 대북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한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즉, 한국은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를 '기본 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 선언'의 이행과 이에 따른 '남북 화해 협력 체제 구축 → 남북 연합 구성'으로 설정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한편,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대북 참여화(engagement) 정책을 강화해왔는 바, 특히 최근에는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정과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일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변화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일은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북한 체제 변화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목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92**